



2019년 관세청 업무계획

|| 목 차 ||

I. 기관 현황	1
II. 2018년 주요 정책성과	3
III. 2019년 정책추진 여건 및 방향	5
IV. 2019년 중점 추진과제	8
1.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기업 총력 지원	
2. 빈틈없는 관세국경 관리로 국민안전 확보	
3. 일 잘하는 세관 구현을 위한 통관관리체계 혁신	
4. 관세행정 쏠분야에 자율적 법규준수 문화 정착	
5. 불법·부정 무역행위 엄단으로 공정한 대외거래질서 확립	
6. 新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전략적 관세외교 전개	
7. 미래 관세행정을 대비하는 성장동력 확충	



I. 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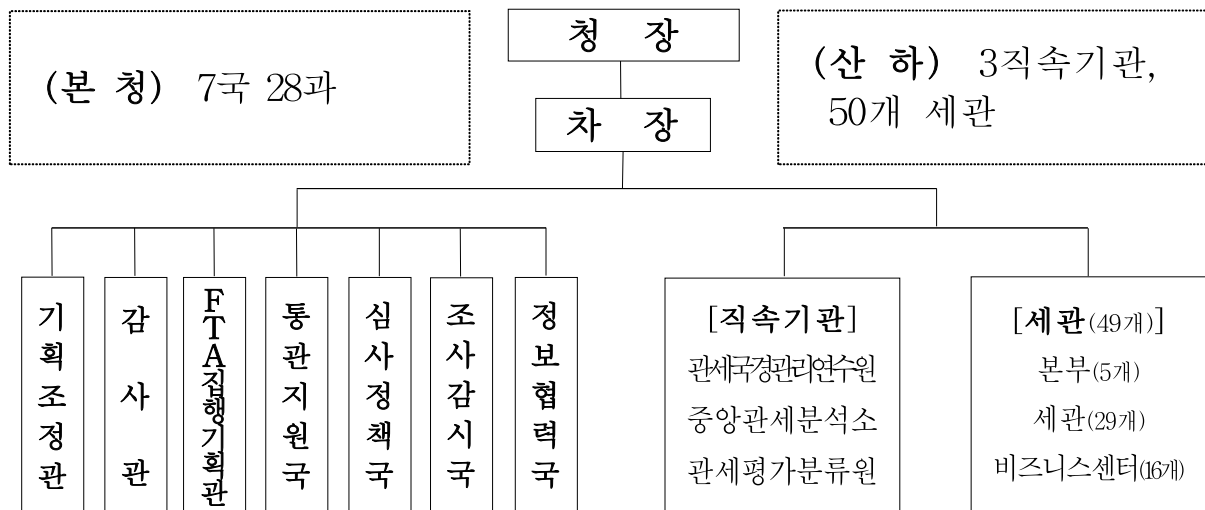
1 개 청 : 1970. 8월,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 발족

2 주 요 기 능

- ① 적정한 수출입 통관 및 물류 촉진 ② 국가재정수입 확보
③ 대외경제질서 확립 ④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보호

- (통관지원국) 수출입·여행자 통관, 보세제도 운영, 무역통계
□ (심사정책국) 관세·부가세 등 징수, 체납관리, 관세탈루 조사
□ (조사감시국) 불법무역·무역금융범죄 단속, 관세국경 감시감독
□ (정보협력국) 관세행정 정보화 기획·운영, 국제기구·세관협력
□ (FTA집행기획관) FTA 집행 및 활용지원, 수출입 원산지검증

3 조 직



본부세관(5)	인천(1급), 서울·부산·대구·광주(2급)
세관(29)	김포공항·인천공항국제우편·수원·안산·안양·천안·청주·성남·파주· 김해공항·북부산·양산·창원·마산·경남남부·경남서부·울산·구미· 포항·속초·동해·광양·목포·대전·여수·군산·제주·전주·평택(3~4급)
세관 비즈니스센터(15)	부평·구로·충주·의정부·도라산·부산국제우편·진해·통영·사천· 온산·고성·원주·완도·대산·익산·보령(5급)

4 정 원

(’18. 12월 기준)

구 분	계	본청	본부세관	세관	직속기관
계	5,007	347	3,146	1,351	163
5급 이상	394	119	158	94	23
6급 이하	4,613	228	2,988	1,257	140

* 연도별 현황 : ’90년) 4,427명 → ’00년) 3,983명 → ’10년) 4,462명 → ’18년) 5,007명

5 2019년 세출예산 : 5,513억원*

인 건 비	기본경비	사업비
3,180억원 (57.7%)	304억원 (5.5%)	2,029억 (36.8%)

* ’18년 세출예산 5,390억원 대비 2.3% 증가

6 2019년 징세규모 : 59.6조 원 (總 국세 294.8조원 중 20.2%)

관 세	부가가치세(수입분)*	기타 내국세**
9.1조원 (15.3%)	41.7조원 (70.0%)	8.8조원 (14.7%)

* 전체 부가가치세 (68.8조원) 중 61%

**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Ⅱ. 2018년 주요 정책성과

✓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도는,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관세청 재도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한해

* 국제공항 세관 만족도 평가 12년 연속 세계 1위('17년), 부패방지 4년 연속 우수기관 ('17년) 등

✓ 관세청은 관세행정 실질화·현장중심 혁신을 바탕으로 관세행정 쏠분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 新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체질개선 노력을 경주하여 기초가 튼튼한 관세행정, 일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위해 총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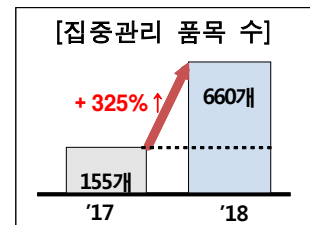
✓ 이와 함께 업무적으로도 안전 등 가치를 중심으로 관세행정의 틀을 전환

□ (국민건강·사회안전 보호) 신속통관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국민안전 확보에 관세국경관리 역량을 결집

* [입항부터 수리까지 통관소요시간(日)] ('15년) 2.05 → ('16년) 1.69 → ('17년) 1.44 → ('18년)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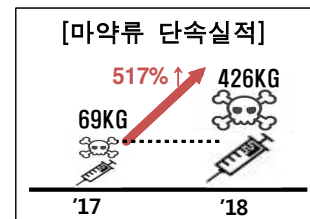
○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수입 생활용품 전반으로 집중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시기·품목·테마별 집중검사 기간 운영*

* (5월) 건강식품·선물·완구, (8월) 휴가용품, (11월) 전기·난방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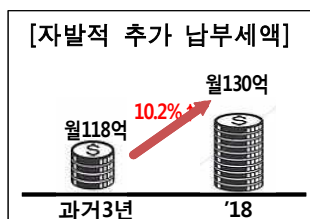
○ 방사능·유독물질·독성생물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검사대상을 확대(1,093→1,372개)하는 등 안전성 검증을 강화

○ 국제 밀수정보 활용역량 제고, 첨단 탐지장비 확충, 특별단속 등을 통해 마약류 국내 밀반입 원천 차단



※ 주요 공항만에 역대 최대 인력·장비를 투입하고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 유지 및 검사강화로 안전한 동계 올림픽 개최를 총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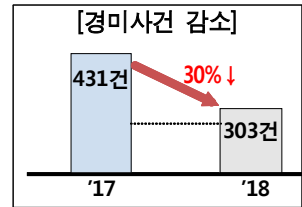
□ (공정한 과세행정) 기존 추정 위주의 강제 관세 조사방식에서 기업과 협력하여 성실신고를 유도 하는 방향으로 전환



- 이 과정에서 성실한 기업은 우대*하되 변칙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

* 수입세액 정산제도 확대 등 // ** 이전가격 조작, 수입대가를 제3자에게 분산지급하여 저가신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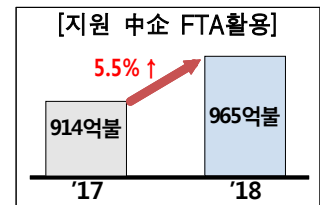
- (예방과 단속의 병행) 획일적인 성과중심·적발 위주의 밀수조사 관행에서 탈피하여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수사역량을 사회적 중대범죄에 집중



- 국외 재산도피, 자금세탁, 무역금융편취 등 반사회적 일탈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무역을 악용한 경제범죄 특별단속* 실시

* 불법외환거래·재산국외도피·조직밀수 등 중대범죄 총 50건, 4조 4,684억원 상당 검거

- (기업 지원) 우리 기업이 수출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출입통관 및 물류 환경 조성



-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중소기업이 편리하도록 개선하고 2,304개사에 무상 보급하여 수출기업의 FTA활용 저변 확대

* 기초정보만 입력하면 원산지판정에서 서류발급까지 자동수행하는 시스템

- 일시적 자금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환급 등 손에 잡히는 세정지원* 활동 수행

* 4,107억원의 중소기업 대상 세정지원을 실시

- 가나·알제리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계약(약 6천만불) 체결*로 관세행정 국제표준을 통한 우리기업의 무역·통관 경쟁력 제고

* 국내 ICT기업에게 해외 구축사업 기회제공으로 약 1,65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 (주요 현안대응) 적극적 외부이슈 대응과 내부적 현장중심 혁신 추진

-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관세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 기관 협업으로 UN안보리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

* 관세행정 혁신TF 활동: 특별분과 권고안(5.30), 중간권고안(6.26), 최종권고안(10.29)

- 보여주기식 목표달성을 지양하고 실질적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하달식의 성과관리 제도를 현장 중심형으로 전면 개편*

* 현장혁신 촉진을 위해 작더라도 의미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이달의 관세인 등 선정·포상



Ⅲ. 2019년 정책추진 여건 및 방향

- 1. 정책추진 여건**
- 2. 정책추진 방향**

1 정책추진 여건

1 [대외경제환경] 성장세 둔화와 新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 증가

- (세계경제) 주요국 금리인상과 개도국의 성장세 약화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하방리스크는 우리나라 교역환경에 부담 요인

* OECD('18.11월): '19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7%로 당초 전망(3.9%, 5월)대비 성장세 약화 전망

- (新보호무역) 상호 보복관세 부과 등 美·中 무역전쟁 여파에 따라 세계 교역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 세계은행('18.5월): 美中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전세계 물동량 9% 감소 예상

- 특히, 덤핑관세를 포함한 무역장벽과 자의적 통관기준 적용 등의 비관세장벽을 통한 자국 산업보호 움직임* 강화

* 한국산 수입규제(한국무역협회, 건): ('15) 175 → ('16) 184 → ('17) 191 → ('18) 193

2 [국내경제환경] 경제 재도약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필요성 증대

- (국내경제) 국내외 주요기관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1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

* [IMF] ('18) 2.8 → ('19^e) 2.6, [KDI] ('18) 2.9 → ('19^e) 2.7, [한국은행] ('18) 2.7 → ('19^e) 2.7

- (수출효과) 주력 수출업종이 대기업의 노동절약적 산업으로 재편되면서 수출의 내수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 감소*

* 한국은행('18.6월): 수출과 내수의 상관계수 ('91~'97) 0.149, ('00~'07) 0.081, ('10~'17) -0.014

- (중소기업)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이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수출에 대한 지원 필요성** 증대

* KOTRA('18.5월): 수출 100만불당 고용효과 중소기업(10.7명), 대기업(2.6명)

** 통계청('18.8월): 내수 중소기업 생존율 54%, 수출 병행 중소기업 생존율 69.8%
한국무역협회('18.8월): 수출시작기업은 수출중단기업에 비해 연평균 고용 3.0%p ↑, 매출 4.4%p ↑

③ [정부정책방향] 현장중심 정부혁신과 남북관계 개선 추진

- (정부혁신)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참여의 상향식 혁신을 통한 신뢰받는 정부를 지향
 - * 양적성장이 아닌 질적성장을 추구, 상생과 공존을 도모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
- (현장중심) 국민과 기업의 요구에 즉응할 수 있는 현장형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혁신과 기관 간 협업을 강조
- (평화의 한반도) 남북경협 재개 및 중·러 대륙과 연결되는 철도·도로의 개통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작용

④ [관세행정에 대한 요구]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관세행정

- (국민 눈높이) 한진家 밀수의혹·북한산 석탄 밀반입 수사로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
-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입 무역현장에서 호흡을 같이하는 관세청의 역할이 증대
- (가치 중심행정) 삶의 질 향상으로 생활안전에 대한 요구 증가
 - 라돈침대, 붉은 불개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정단계에서 물류를 관리하는 관세행정 중요성이 재인식
-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AI 등 신기술 활용은 대세적 흐름
 - 관세청*은 어떤 정부기관 보다 신기술 접목이 가능한 분야가 많아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

* 26만여 수출입업체, 170여 정부·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연간 8.7억건의 무역서류를 처리

추진 방향

국민과 함께 손에 잡히는 성과를 창출하는 관세행정 전개

- 新보호무역주의·경제성장 둔화에 대응하여 고용창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식의 재정립 필요
-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위해 요인을 차단하고 통관·물류 체계를 혁신하여 기초가 튼튼한 관세행정 구현
- 경미한 위반행위의 예방과 반사회적 중대범죄 단속의 조화를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무역환경 조성
- 현장중심의 관세행정 혁신을 정착시켜 국민이 신뢰하는 관세행정을 실현

중점 추진 과제

- 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기업 총력 지원
- ② 빈틈없는 관세국경 관리로 국민안전 확보
- ③ 일 잘하는 세관 구현을 위한 통관관리체계 혁신
- ④ 관세행정 쏠분야에 자율적 법규준수 문화 정착
- ⑤ 불법·부정 무역행위 엄단으로 공정한 대외거래질서 확립
- ⑥ 新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전략적 관세외교 전개
- ⑦ 미래 관세행정을 대비하는 성장동력 확충



IV. 2019년 중점 추진과제

- 1.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기업 총력 지원**
- 2. 빈틈없는 관세국경 관리로 국민안전 확보**
- 3. 일 잘하는 세관 구현을 위한 통관관리체계 혁신**
- 4. 관세행정 쏠분야에 자율적 법규준수 문화 정착**
- 5. 불법·부정 무역행위 엄단으로 공정한 대외거래질서 확립**
- 6. 新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전략적 관세외교 전개**
- 7. 미래 관세행정을 대비하는 성장동력 확충**

□ 수요자 입장에서 기업지원체제를 재설계하여 운영

- 기업의 수출성장 주기(초보→유망→강소)에 맞는 단계별 관세 행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 (초보기업) 무역실무 컨설팅, 수출 유망품목 발굴 정보제공, FTA수출 인큐베이팅 지원 (유망기업~) 수출전략 수립에 필요한 무역통계 제공, 세정지원, 해외통관애로 해소

- 기업이 밀집한 지역세관을 거점으로 현장중심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 관계기관과의 협업지원*도 확대

* (예) 관내 수출 시작·중단·지속 업체정보 등을 지자체에 제공하여 지원효과 극대화를 유도

□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전자상거래 인프라 혁신

-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전용 통관 플랫폼을 구축하고 판매 및 배송 내역이 수출신고로 전환*되는 중소·영세기업 친화적 신고체계 마련

* 쇼핑몰 판매내역, 우체국 배송신청 정보를 추출하여 자동으로 수출신고서 생성

- 보관·통관·배송 등 물류절차를 저렴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센터 구축 추진

□ 보세제도의 산업지원 기능 활성화로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 대기업 위주의 보세공장제도*를 중소기업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와 요건을 개선하여 진입장벽을 완화

* 세금부담 없이 수입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가공 후 수출 (보세공장의 대기업 비중 90.2%)

- 공항만 물류 소과정에 대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전자상거래 국제물류허브(GDC)의 유치 확대

2

빈틈없는 관세국경 관리로 국민안전 확보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통관안전망을 촘촘하게 운영

- 국민건강·안전과 직결된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 확인대상을 확대 지정*하여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요건 확인을 강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등을 세관장확인대상에 포함 추진

- 국민적 불안감이 높은 방사능 함유물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협업검사센터* 업무영역을 광역단위로 확장

* 안전관리 주관부처와 세관이 합동으로 법령에서 정한 허가 및 승인 사항을 검사

- 우범성이 높은 화물의 경우 세관검사 손실보상제도(관세법 §246조의2)를 적극 활용하여 정밀 개장검사를 실시

□ 불법 마약류 국내 반입 원천봉쇄로 마약청정국 위상 확립

- 마약 주반입경로*의 물품 검사과정에서 과학탐지장비 활용을 확대하고 우범국발 컨테이너 화물의 분석 및 검색**을 강화

*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국제 우편물 등 // ** 내시경카메라 등 비파괴 장비 활용

- 황금의 삼각지대 등 마약 산지국 세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국내외 정보채널 강화 등 마약 밀반입 경로의 감시를 확대

□ 실효성 있는 위험물품 차단을 위한 통합감시체제 구축

- 대테러·국경단계 방첩을 총괄하는 관세국경안보팀을 신설하고 테러물품 적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해물품 반입 차단

* 적발된 안보위해물품의 X-ray영상, 반입자 정보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검색강화

- 지능형 CCTV·드론 등 ICT 신기술·장비를 도입하여 우범 화물의 실시간 흐름을 추적하는 입체적 감시체계*를 정착

* 부산항에 차량·감시정·드론 등 육해공을 총괄하는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점진적 확대

- 국경관리기관 간 위험정보 공유·분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통관단일창구 및 CIQ정보공유시스템 운영을 개선

3

일 잘하는 세관 구현을 위한 통관관리체계 혁신

□ 신기술을 접목하여 수출입통관 관리체계를 고도화

- AI기반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하여 低위험 물품은 자동심사하고 高위험 물품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통관체계 개편
- 급증하는 해외 직구물품* 통관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전자상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참여자간 신뢰도를 제고

* 전자상거래 반입실적(백만불) : ('13년) 1,040 → ('15년) 1,521 → ('18.10월) 2,191

□ 물품특성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현장중심 통관행정 구현

- 검사대상물품의 선별을 지역·세관특성에 맞도록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여 우범화물에 대한 실시간 대응역량 강화
-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대응하여 특송물품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구매자에게 직구물품 통관정보를 제공하여 명의도용 피해 방지

* 자가사용 개인물품과 판매용 목적의 회사 물품을 구분하여 관리

- 인천항만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물류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검사장을 구축('19~'21년)

* 인천항 종합 발전계획 2030 : 여객터미널 이전(아암2단지), 내항 일부폐쇄, 신항 추가개발 등

□ 높아진 여행자 요구 수준을 반영한 세관절차 개선

- 여행자 통관편의 증진을 위해 모바일 전자신고 대상을 승무원에서 여행자까지 확대하고 자진신고자 전용통로*를 신설

* 별도의 통로를 통해 전용검사대로 직행하고 물품검사는 최소화

- 협소하고 산재되어있는 면세품 인도장을 통합 재배치하고 인도방법을 다양화하여 면세품 인도체계를 효율화
- 입국장 면세점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

4

관세행정 소분야에 자율적 법규준수 문화 정착

□ 정확한 수출입신고를 위한 사전점검 프로세스 재정비

- 기업별 법규준수도*의 측정항목, 방법 등 세부내역을 공개하여 기업 스스로 법규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 기업별 수출입 검사율 지정, 무역성실업체(AEO) 인증기준, 보세구역 특허심사 등에 활용
- 기업이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격·품명 등 수출입신고 항목에 대한 오류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제공
- 특혜대상 수출물품이 FTA효과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수출前 단계에서 원산지 점검 및 사전판정 서비스를 지원

□ 납세협력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성실납세 지원

- 중소·영세 기업이 사후추징으로 인한 경영위험에 직면하지 않도록 맞춤형 납세도움 정보제공을 확대*
 - * 제공정보 확대(30→50종), UNI-PASS를 활용해 기업에 직접 제공
- 수입세액정산제 대상기업을 AEO에서 공기업으로 확대하고 과세가격 사전심사 활성화를 위해 유효기간 연장 등 혜택 강화
- 불합리한 과세에 따른 쟁송 결과 등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류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 도입 추진
 - * 납세자권리헌장·조사과정의 적법절차 준수여부, 중복조사 방지여부 등 감독

□ 불법·부정 무역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 강화

- 단순하고 경미한 위반 사건은 형사처벌에서 계도 중심으로 전환하여 재발에 따른 범법자 양산을 방지
-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환거래 절차상 위반 등 무지(無知)형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위반 유형별 점검표 제공과 업종별 설명회 개최

5

불법·부정 무역행위 엄단으로 공정한 대외거래질서 확립

□ 고의적 조세탈루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 조세회피를 위한 이전가격 조작, 해외지사를 매개로 한 대금 분산결제 행위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한 관세조사 역량 집중
- 세율 및 가격차를 악용하는 농수산물에 대해 산지·품질별 해외가격 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하여 통관 前 세액심사를 강화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타인명의 우회수입을 추적·관리하고 체납자의 국내외 재산정보를 추가 확보*하여 악성체납 근절

* (신규확보) 건강보험료, 해외금융계좌 등 // (연2회→실시간) 골프장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

□ 무역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반사회적 경제범죄 척결

- 무역을 가장한 국부유출·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우범성이 높은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점검 및 조사 강화
-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통해 분식회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상장요건 허위충족 등 기업비리 차단
- 환경파괴물품의 불법 수출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불량식품, 가짜 의약품 등 국민건강 위해사범을 엄단

* 금감원 전자공시자료로 기업 재무정보DB 구축 후 수출입·외환자료와 연계 분석

□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단속 인프라 확충

- 첨단화된 지능형 범죄에 대응하여 모바일 포렌식 장비·인력을 확충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광역 특별수사팀을 운영
- 무역관련 재산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해 세관 수사권을 사기·횡령·배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분쟁을 적시 해소

- 세관당국·유관기관간 협업*을 강화하여 통관애로를 즉시 파악하고 현지 기동팀을 신속하게 파견하여 조기에 해소

* 외국세관·해외공관·KOTRA·무역협회·민관합동 비관세장벽 협의회와의 상시대응체제 구축

- 통관규제·품목분류 이견·FTA특혜배제 등 수출기업이 당면하는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둔 실용적 양자간 관세청장회의 운영
- 현지세관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통관애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관세관·협력관 파견을 추진

□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한 관세당국간 협력 강화

- 지역별 거점국가와 성실기업 상호인정약정(AEO-MRA)체결을 확대 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세관절차 간소화 이행점검을 강화
- ASEAN·인도 등 FTA 체약국을 대상으로 세관간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e-C/O)을 확대하여 현지 통관절차 간소화

□ 관세행정 한류 확산으로 우호적 해외 통관환경 조성

- 우리나라 국익과 수출기업을 대변하기 위해 관세전문가가 세계 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비관세장벽이 높은 개도국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능력배양 교육을 확대하여 우호적인 人的 네트워크를 구축
- 관세행정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다자개발은행(IDB, AfDB), 개발원조사업(ODA)과 연계한 전략적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추진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중심 혁신활동 가속

- 민간 주도 「관세행정 혁신T/F」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

* 여행자 통관 사각지대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면세점 행정체제 확립 등 14개분야 44개과제

- 국민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 혁신 과정에 국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新성과관리제도를 보완·발전*하여 자율적 현장 혁신체계 강화

* 지역·세관 특성에 맞는 혁신과제의 발굴, 추진, 구체적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

□ 미래 도전요인에 대비한 관세행정 발전전략 추진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관세행정에 융합하여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한 「Smart Customs*」 기반 구축

* 빅데이터 기반 위험관리, AI 통관검사, 블록체인 활용 통관물류 혁신 등 5대 전략

- 전자상거래 급증, ICT 기술발전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조직을 재설계*하고 관세행정 미래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

* (예) 빅데이터 센터, 성실신고지원 전담조직, 현장 위험관리센터 신설 등

** ICT 신기술 개발,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 국제물류 등 6개 분야 60명 위탁교육

- 남북교류 활성화와 유라시아 대륙 물류연결에 대비하여 관련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육로통관, 감시체계를 본격적으로 준비

□ 깨끗하고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구현

- 직원 스스로 점검하는 자율적인 청렴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금품수수·성범죄 등 중대비위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 과도한 의전 등 불합리한 내부 관행을 지속 개선하고 회의 간소화, 유연근무 확산 등 합리적인 근무 형태를 정착

- 직렬·성별 구분 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하고 환경이 열악한 부서의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